

# 보도자료



**기획재정부**  
MINISTRY OF STRATEGY  
AND FINANCE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일시 | 2011. 6. 22(수) 16:00 이후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배포일시 | 2011. 6. 22(수)          | 담당부서 |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       |
| 담당과장 | 양충모(2150-5310)          | 담당자  | 황경임 사무관(2150-5312) |

## 제목 : 총괄·총량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개최 -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'11~'15년 중기 재정운용계획 논의 -

- ☐ 기획재정부는 6.22일 KDI와 공동으로 「'11~'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 수립을 위한 **총괄·총량분야 공개토론회**를 개최하였음

- 일시 및 장소: '11.6.22(수) 14:00~16:00, 서울지방조달청 PPS홀
- 토론주제: '11~'15년 중기 재정운용계획
- 참석자: 박완규 중앙대 교수(사회),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(발제),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, 강신욱 보사연 연구위원,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,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, 이동원 삼성경제연 연구위원, 현진권 아주대 교수, 김규옥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, 홍동호 재정부 재정정책국장

- ☐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**빠르게 개선되고** 있으나, 저출산·고령화, 잠재성장을 저하,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고려할 경우,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

- 특히, 최근 무상복지 논쟁, 내년도 선거일정 등 감안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

- 재정준칙 법제화 등 '재정 포폴리즘'에 대응한 재정규율을 확립하고,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 효율화 제고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함

- **분야별 자원배분 방향과 관련하여**(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발제)
  - **경제분야**는 재정투자 확대 보다는 **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경제환경** 구축에 중점을 두고
  - **사회분야**는 지원을 강화하되, 보편적 혜택보다는 **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성과주의 원칙**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

※ 발표 및 토론 상세내용 별첨

- 한편, 총괄·총량분야 토론회에 앞서 개최된 **개회식**(09:30~09:50)에서 **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**은 인사말을 통해
  - **향후 재정정책의 최우선 과제**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에 복원하는 것이며
  -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**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**은 지속해 나가되, 일하는 복지, 맞춤형 복지 등 우리 여건에 맞는 **지속가능한 복지 패러다임**을 정립해야 한다고 언급
- 또한, 오늘 개회식에는 **정갑윤 예결위원장**이 참석하여 이번 공개 토론회가 국민의 건전한 목소리를 듣고, 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치하하며
  - **내년도 정치일정**에 따라 예상치 못한 지출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, 18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으로서는 **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마련**을 위해 국회, 정부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
- 기획재정부는 금번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「'11~'15년 **국가재정운용계획**」 수립시 반영할 계획임

## I. 발표내용 요약

※ 발제: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

### 〈 중기 재정운용 방향 〉

- ◇ 우리경제는 금융위기 극복이후 재정수지가 빠르게 개선중이나, 잠재성장률 하락, 저출산·고령화 등 위험요인 존재
  - 특히, 재정부문은 재정지출 증가 및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거시경제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
- ⇒ 향후 재정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각종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
  - i)포퓰리즘에 대응한 재정규율 확립, ii)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, iii)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

### 1] 경제·사회여건 전망

- (세계경제) 유로지역 재정위기, 물가상승 압력 등에도 불구하고, 일부 선진국·개도국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 유지 전망
  - \* IMF 세계경제 전망('11.4월, %): ('10) 5.0 → ('11) 4.4 → ('12) 4.5
- (국내경제) 수출·내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'11~'12년중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%대 초반의 성장률 전망
  - \* KDI 국내경제 전망('11.5월, %): ('10) 6.2 → ('11) 4.2 → ('12) 4.3
- (분배구조) 근로연령대를 중심으로 빈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이는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기인
  - \* '97~'08년간 빈곤율은 3.3%p(8.7%~11.9%p) 상승(이중 2.2%p는 근로연령 가구주, 1.1%p는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상승분)

## 2 중장기 재정위험요인

- (잠재성장률 저하) 급속한 저출산·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입기반이 위축되는 반면 각종 지출소요는 증가

\* OECD는 '11~'15년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3.8%로 전망

- (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) 연금·의료 등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 급증 예상\*되어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이상 국가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\*\*

\* '10~'50년간 연금·의료관련 재정지출은 GDP의 6.0%에서 17.8%로 11.8%p 증가(EU 지출 증가폭 5.6%p의 2배 수준) 전망(조세연)

\*\* GDP 대비 국가채무: '10년 33.5% → '50년 137.7%로 증가 전망(조세연)

- (글로벌 경제위기 전이) 향후 금융위기가 빈발하면서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 초래 가능성

- (통일비용) 불확실하지만 막대한 통일비용도 재정위험요인

\* 독일은 통일이후 '91~'03년까지 매년 GDP의 4~5%의 통일비용 발생

## 3 중기재정운용 방향

- ① (재정총량)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각종 재정위험 관리 강화

- 최근 재정건전성이 개선중이나 세수감소(성장률 하락 위험 등) 및 지출증가 요인(정치권 등의 지출요구 확대 등) 상존

- 재정준칙 법제화 등 강력한 세입 및 세출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

- (세입기반 확충) 비과세·감면 축소·폐지\*, 해외소득 탈세 방지, 국유재산 및 채납조세 관리 효율화 등

\* 비과세·감면에 대해서는 총량규제 및 평가제도를 보다 강화

- (지출구조조정 · 효율화) 분야별 재원배분 재구성, 성과관리 강화, 의무 · 재량지출의 구분관리, 재정위험관리체계 구축 등

② (재원배분 방향) 기존 정부주도 경제성장에 한계, 경제분야는 적극적 구조조정, 사회분야는 강화하되 효율화 추진

- (경제분야)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재정투자 보다는 규제개혁,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시장친화적 경제환경 구축에 중점

\* (SOC) 정부자본스톡/GDP 비율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추계  
(중소기업, 농업) 정부개입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약화

- (사회분야) 빈곤확산 등에 대처하여 지원을 강화하되 선별주의 및 성과주의 원칙을 확립하고, 연금 · 의료부문을 개혁

\* (복지) 저소득층 근로연령대 대상 일자리정책 강화 및 생계지원 확대  
(교육) '반값 등록금'은 he고등교육 예산을 구축하고 과잉교육 심화

③ (재정준칙 강화) 내년 총 · 대선으로 지출 관리가 어려운 상황

- 정치적 지대추구행위(rent-seeking)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강화하고,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PAYGO원칙 적용 강화

#### 4 결 론

-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가운데, 대중융합적 재원배분 등 재정규율 약화 우려

- 대중융합적 재원배분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여 안정적 경제성장과 건전한 사회발전을 저해

- 향후, i)포퓰리즘에 대응한 재정규율 확립, ii)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지원, iii)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

## II. 주요 토론내용

### □ 강석훈 (성신여자대학교 교수)

- '11~'15년간 재정운영은 재정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우선 순위로 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공동체 가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함
- 현재 각종 복지논쟁과 내년도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
- SOC 건설예산의 과감한 감축, 중소기업·농어촌 분야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성 제고 노력과 함께,
- 사회보장제도의 단기·중기·장기 청사진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

### □ 고광철 (한국경제 논설위원)

- 현재 우리나라 재정은 양호한 상황이나, 공기업·지방정부 채무, 통일비용, 고령화 및 복지지출 확대논쟁 등 재정위협요인이 큰 상황
-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낭비 방지, 세입 확충 노력과 함께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비율을 3% 이내에서 균형달성시까지 매년 감소하는 방향으로 규율할 필요
- 조속한 감세 철회 여부 결정, SOC 분야 지출과 함께 늘어나는 복지 지출소요 확보를 위해 세입확대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얻는 노력 필요

### □ 박완규 (중앙대학교 교수)

-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핵심생산가능인구 감소, 복지지출 급증 등의 경제·재정여건 하에서 향후 부문별 재정운용계획의 근간이 되는 총량분야 계획의 중요성이 큼

- 중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 소요가 존재하더라도 효과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할 필요
- 사회복지 부문 비자격자 부정수급 차단, 맞춤형 복지 도입 및 적정 복지 수준에 대한 규범적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필요

#### □ 이동원 (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)

- '20년 이후 재정 악화 본격화에 대비하여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향후 5~10년이 재정준칙을 설정할 적기
  - 명확한 장기 재정목표를 설정하고,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한 재정 준칙을 마련할 필요
- 또한,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·R&D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장기 성장률을 제고할 필요

#### □ 현진권 (아주대 교수)

- 내년 총선·대선 일정에 따른 무상복지, 보편적 복지 등 복지지출 확대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
- 비효율적이고 비가역적인 보편적 복지보다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복지를 유지해야 하며, 국민연금, 건강보험 구조 개혁도 필요
-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, 이런 측면에서 현재 법인세 인하계획 철회 논의는 우려스러움
-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통해 서비스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

## □ 배상근 (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)

- 현 잠재성장을 추이로는 지속가능한 재정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를 안정적 거시경제여건 구축에 두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 필요
- 정부의 낙관적인 거시경제전망이나 ‘뒤로 미루기식’ 재정안정 목표를 배제하고 안정적 재정유지를 조속히 실천할 필요
- 재정총량의 안정적 관리와 복지분야 재정지출 증가율 한도 설정
  - 재정준칙을 강화하기 위해 ‘One-in One-out’(새로운 복지지출·감면·과세 등을 도입시 동일한 수준의 복지지출·감면·과세 등을 제외)도 고려
-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쟁력 제고

## □ 강신욱 (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)

- 성장중심의 재정운용만으로는 빈곤과 불평등 심화를 억제하는데 한계, 시장소득 증대를 위한 분배정책적 접근 필요
- 사회정책 분야 재원배분 방향을 선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, 성격상 보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존재
  - 선별주의를 적용하더라도 현 빈곤층과 차상위층에 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함, 가구소득 분포 등을 보고 적절한 기준 선택 필요

## 기획재정부 대변인